

세계일류 기록국가 실현을 위한

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

- 
- 정보가 모이는 곳 !
 - 역사가 숨쉬는 곳 !
 - 미래가 보이는 곳 !

 국가 기록원

I. 일반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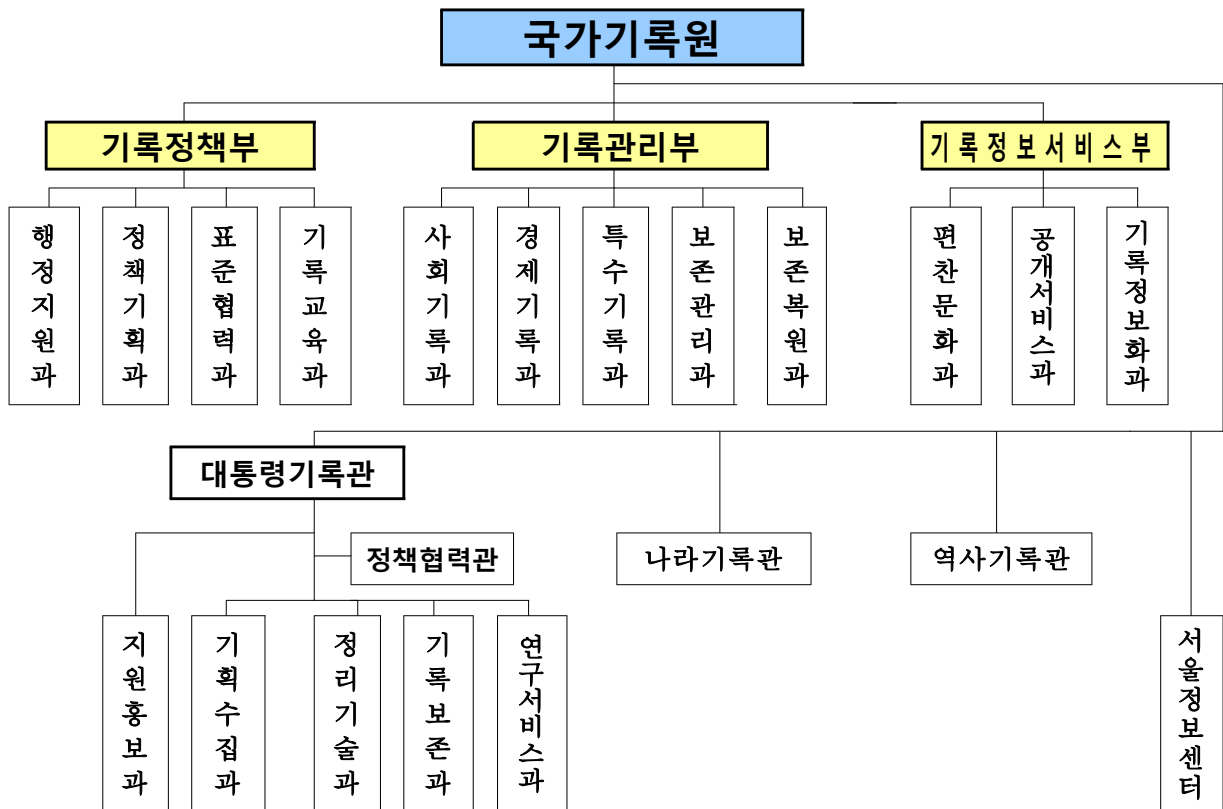
1 연혁

- 1969. 8 : 총무처 소속 정부기록보존소 설치
 - 1998. 7 : 정부대전청사로 본소 이전, 서울사무소 설치
 - 2004. 5 : 국가기록원으로 명칭 변경
- ※ 나라기록관(성남) 개관('08.4)

2 주요기능

-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
 - 공공·주요 민간기록물의 수집·정리·기술·보존
 - 기록정보자원의 편찬, 콘텐츠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
- ※ 소관 법률 : 「공공기록물법」 및 「대통령기록물법」

3 조직 및 정원 : 3부 3관 17과 1센터 / 346명



4 소장 기록물 및 보존시설 현황

- 국무회의록 등 공공기관 기록물
- 항일운동가 재판기록 등 조선총독부 문서
- 조선왕조실록 태백산 사고본 848책(국보 151-2호)

(’09.10 기준)

구 분	소 장 량	비 고
문 서	2,037천권	조선왕조실록, 총독부 및 정부수립후 문서 등
도 면	159천권	지적원도, 기상관측도, 설계도 등
카 드	176천권	인사기록, 병적카드, 연금카드 등
시청각기록물	1,627천점	사진, 녹음테이프, 영화필름 등
행 정 박 물	51천점	국새, 공직자선물, 관인, 우표 등
마이크로필름	242천롤	문서, 관보, 지적·임야(원)도, 광구도 등

○ 서고시설 현황

구 분	대전서고	성남서고	부산서고	합계
서가길이	28km	268km	31km	327km
수용능력	770천권	4,000천권	1,394천권	6,164천권

※ 현재 서고 수용능력의 약 43% 활용중이나, 2015년경이면 만고 예상

※ 부산서고 시설확충(21km, 70만권 추가) 리모델링 진행 중(’10년 완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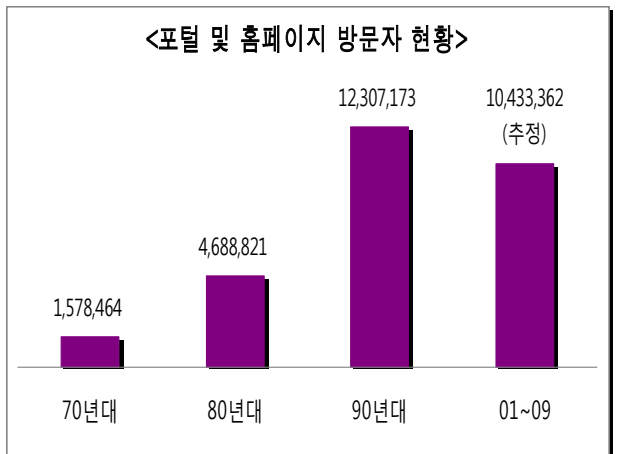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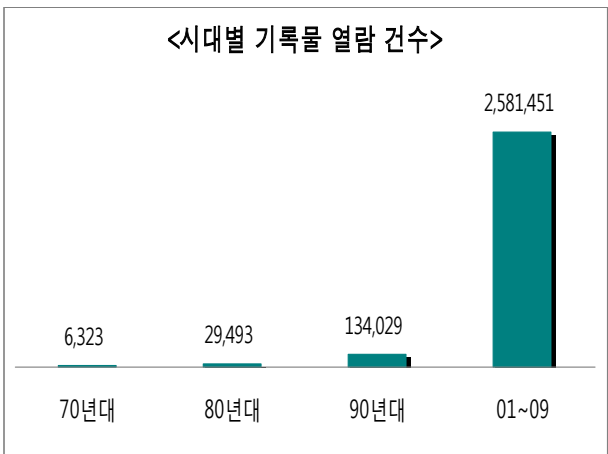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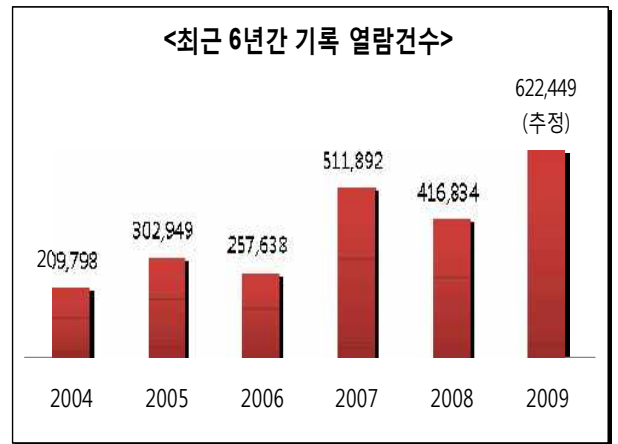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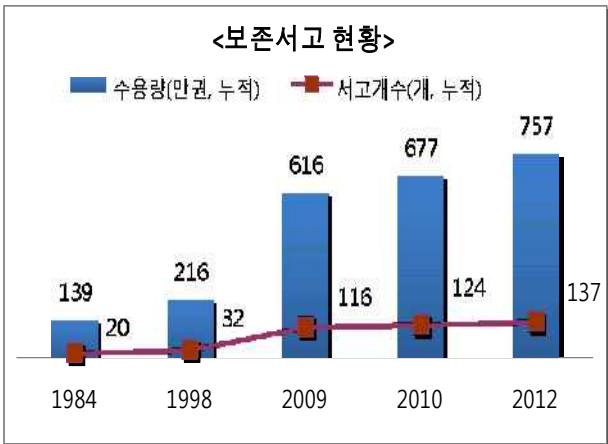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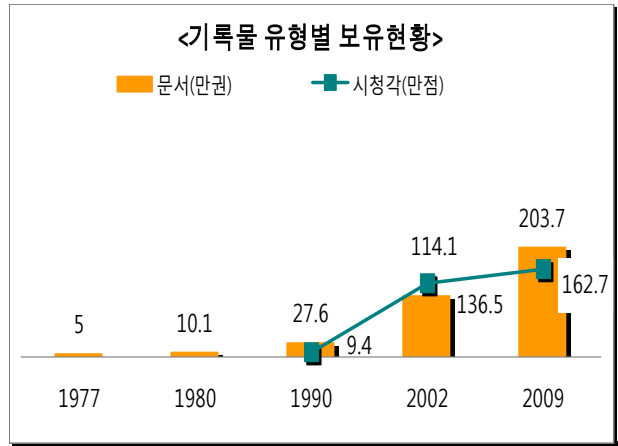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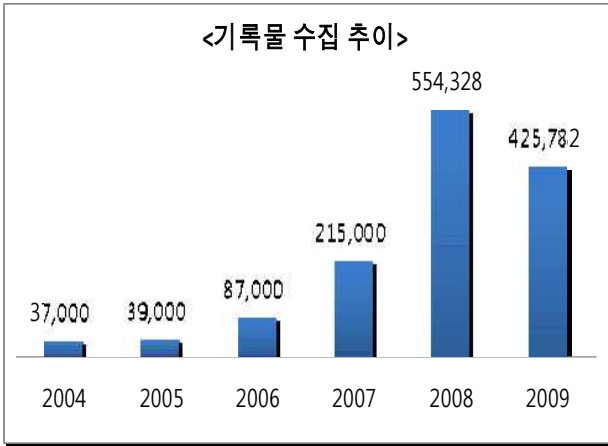
※ 중간기록관리시설(12,510m², 3,784평) 신축 추진 중(’12년 준공예정)

5] 그간의 기록관리 발전과 성과

	초창기 · 1969-1995	확립기 · 1996-2003	발전기 · 2004 ~
	정부기록보존소		국가기록원
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부공문서규정 공문서보관보존규정 사무관리규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('99제정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공기록물법('06전부개정) 대통령기록물법('07제정)
기구 및 정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과 22명('69) 부산지소 설치('84) -2과1지소122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소 대전이전('98) -서울사무소 설치 -3과1지소131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가기록원 명칭변경('04) 대통령기록관 설치('07) -3부12팀3관1센터 350명('08)
제도·정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료행정 활성화계획 수립('80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록관리기구 체계화 기록관리 표준화 원칙 확립 전문요원제도 도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록관리 표준제정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재평가·재분류 주기 조정 기록관리 R&D('08-) 전문교육훈련기관 지정('07) 각급기관 평가·컨설팅('08-) 국가기록관리 선진화전략 수립('09)
분류 및 보존기간 책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부공문서분류표, 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표 -기능분류 및 보존기간표 별도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록물분류기준표 -기능별 보존분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록관리기준표 -BRM 기반으로 개편('07) -철단위 분류·등록 -단위업무별 보존분류
수집·보존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산조폐창 등에 임시보관 전문보존서고 설치(부산지소, '84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전서고 신축('98) 기록물관리 전산화 체제 도입('96) 기록관리 전산기반 구축('99-'03) -전자문서→자료관→국가기록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나라기록관 신축('07) 범정부적 전자기록체계 구축 -기록관리시스템 보급 -전자기록물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·확산 -문서류 RFID 부착
대국민 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열람서비스 개시 -23('70)→3,156('84) →10,573('95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열람서비스 증가 -32,445('00) →130,642('03) 홈페이지 개설('00) -기록정보서비스 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열람서비스 확대 -209,798('04) →416,834('08) 소장기록물 편찬 및 각종 콘텐츠 개발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기획·문화행사 개최
국제교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ICA 가입('79) EASTICA 가입('93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외 MOU체결(3국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MOU체결 확대(6국) 개도국 공무원 교육('08-)

Ⅱ.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1. 기록관리 주요 분야별 변화추세



2. 국가기록관리 선진화전략 단계적 추진

	2009년 (기반구축단계)	2010년 (고도화단계)	2013년 (선진화단계)
시스템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중앙부처 전자기록 관리체계 구축 -기록관리시스템 보급 완료 ▶ 기록관리표준 제·개정으로 내실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지자체·교육청·기타 공공기관 전자기록 관리체계 확산 -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 확산 추진 ▶ 기록관리표준인증 기반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범국가적 전자기록 관리체계 구축 -모든 공공기관 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-영구기록관리시스템 확산 ▶ 기록관리표준확산 및 인증체계구축
인프라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록물관리기관 일부 설치 -지방기록물관리 기관(0%) ▶ 중앙부처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배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록물관리기관 설치 확산 -지방기록물관리 기관(10%) ▶ 지자체, 교육청, 기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범정부적 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-지방기록물관리 기관 (50%) ▶ 기타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배치
서비스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일부기관과의 통합 검색서비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정부, 민간, 공공기관 기록정보 통합활용 기반 구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정부, 민간, 공공기관 기록정보 통합활용 체계 구축
국제협력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록관리 국제교류 협력 기반 조성 및 국가브랜드 개념정립 -인터파레스 심포지움 개최 ▶ 해외한인기록유산 조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ICA집행이사회, 국제 기록문화전시회 등 국제행사 개최 및 국가브랜드 기반조성 ▶ 해외한인기록 수집 기반 조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록관리 후발국 지원 등 국제사회 기록관리 선도로 세계최고의 기록문화 브랜드 실현 ▶ 해외한인 기록유산 네트워크 구축

3. 2010년 정책방향 및 세부추진계획

□ 2010년 정책 방향

1 수집·관리 내실화로 신뢰받는 기록관리를 구현한다.

- 국가 주요기록물 수집·관리의 체계화
- 대통령기록물 수집·관리체계 강화
- 주요 민간기록물 수집 강화
- 전자기록 수집·관리 방안 마련

2 실용적 제도정비를 통해 견실한 기록관리기반을 조성한다.

- 국가기록관리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
- 각급기관의 기록관리 역량강화 지원
- 기록관리 현황평가 및 기록관리기관간 협력의 강화
- 기록물 보안관리 강화 및 연구개발 확대
- 기록물 보존 및 전시시설 인프라 확충

3 기록정보의 자원화 및 대국민 친화형 기록서비스를 강화한다.

- 주요 국가기록의 콘텐츠화
- 정보공개 활성화 및 열람서비스 강화
- 국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 확산

4 2010 전시회 성공적 개최로 기록문화 국가브랜드화를 추진한다.

- 2010 국제기록문화전시회 성공적 개최
- 국제 교류협력 사업 확대

- ◇ 중요기록물의 선별 수집 및 관리로 기록관리 효율성 제고
- ◇ 전자기록물 본격 이관('14)에 대비한 기반 마련

① 국가 주요기록물 수집·관리의 체계화

- 보존가치 있는 '良質'의 기록물 수집·관리
 - 각급기관 보존기간 책정 및 수집 선별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「기록물 보존기간 준칙」 마련
 - 중앙행정기관 적용 후 '11년 이후 특별행정기관 등으로 확대
 - 보존기간 적정성 검토를 통해 과도한 보존기간 하향조정
 - 준영구 기록물 조기(70년→30년) 재평가 추진
 - 재평가 대상 기록물 조사 및 선별기준, 프로세스 등 정립
- 정부간행물 수집·등록 등 관리체계 개선
 - 각급기관 제출 권수 조정으로 관리비용 절감(3권→2권)
 - 보존기간 책정(기존 미책정) 및 주기적 평가 후 중요 간행물에 한하여 영구보존 실시
 - 전자적 생산 추세에 맞춰 전자매체 송부 등 전자적 관리체계 도입
- 정부산하 공공기관 중요기록물 수집 강화
 - 공공기관 기록물 생산·등록·이관 등 관리 세부 매뉴얼 마련
 - 기록분류체계 개발 및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·규격 등 제정
 - 美·英·濠 등 공공기관 기록관리 해외 선진사례 조사
- 국가 주요사업 및 행사 등 영상기록화 지원
 - 4대강 살리기, 경인 아라뱃길 사업 등 주요사업 대상 절차별 표준화 방안 마련 등 본격적 영상기록 생산 지원
 - 기타 녹색뉴딜사업 발주시 사업내용에 영상기록 생산 포함 추진

② 대통령기록물 수집·관리체계 강화

-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내실있는 수집·관리
 - 국가 및 자치단체 소장 대통령기록물 현황조사 및 실태점검 실시
 - 최규하 대통령 기록물 위탁 및 윤보선 대통령 기록물 기증 추진
 -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(연세대 소장) 정리 지원(사진 약 2만장)
 - 온·오프라인 민간 소장 기록물 기증 활성화 캠페인 추진
- 역대 대통령 관련 해외기록물의 적극적 발굴·수집
 - 대만 국사관 소장 관련 기록물 상호교환 추진
 - 미국(트루먼도서관)·독일(애버트재단) 등의 주요 소장기록물 수집
 - 국사편찬위 등 국내 유관기관과의 공동조사 등 협력활동 강화
- 역대 대통령 관련 구술채록 내실화
 - 구술채록 사업기간(6월→10월) 및 구술 대상자(10인→20인) 확대
 - 박정희·윤보선 전대통령 유족 및 관련인사 구술채록
 - 구술기록의 체계적 공개·활용을 위해 美·英·獨 등 선진 사례조사 및 관리규정 마련

③ 주요 민간기록물 수집 강화

- 「내고장 역사찾기」사업 확대
 - '09년 사업경험을 토대로 연초에 사업지침 및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자치단체 참여 적극 유도
 - 2010년 '행정인턴 및 희망근로 사업'에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살리기에 기여
 - 사업단위별로 행정인턴 2명, 희망근로 5명 및 향토전문가 등으로 구성
- 국민생활사 관련 민간기록 기획수집
 - 인터넷 공모, 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'60~'70년대 지역별, 사회분야별 국민생활사 관련 기록물 수집
 - 새마을 운동, 근검절약, 저축운동 등

- 국가 주요정책관련 지역사회 시행자,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
구술채록 사업 추진
- 가치있는 주요 민간기록물에 대한 국가기록물 지정 확대
 - 국내 주요기업 창업기록, 주요 민간단체 기록물 등

4 전자기록 수집·관리 방안 마련

○ 각급기관 전자문서 생산·관리현황 조사

- 이관대상 전자문서의 상태, 용량, 생산프로그램 등 조사('10.4~6)
- 전자문서 이관에 필요한 기준 보완 및 문제점 분석('10.10)
 -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자문서 이관대책 및 지침 마련('11)

○ 구 전자문서 관리유형별 이관대책 수립

- 관리유형(원본 출력, 원본 미출력, 마이그레이션 등) 조사결과에
따른 이관방안 마련

※ 구 전자문서 관리현황 조사 : 중앙 및 특별행정기관('09.10~12)

○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및 웹기록물 수집·관리계획 수립

- 각급기관 시스템 환경, 운영현황 등 조사('10.4~6)
- 이관대상 선별, 이관시 관리항목, 이관 프로세스 등 도출('10.11)
- 행정정보시스템 시범이관 실시(행정, 공공, 한시기관 각 1개 시스템)

○ 표준기록관리시스템(RMS) 지속 확산('12년까지 단계적으로)

- 자치단체 본격 확산(36개) 및 교육청 시범운영(4개) 추진
- 서비스데스크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·효율적 운영 지원
- 비규격 문서관리시스템 사용기관(공공기관, 국공립대 등)에 대한
보급방안 마련

- ◇ 보존·관리부담 경감, 공개 활성화 등 기록관리제도 선진화
- ◇ 효율적인 기록물관리기관 운영 지원 및 보존시설 인프라 확충

1 국가기록관리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
- 보존·관리부담 경감을 통한 현장중시형 기록관리 구현
 - 보존매체 수록 후 각급기관의 원본기록물 폐기절차 마련
 - 준영구기록물의 보존가치 재평가 시기(70년→30년) 단축
 -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기간 책정권한 강화 등
- 비공개기록물 공개 및 활용 기준·절차 마련
 - 기록물 성격별 비공개 상한기간 설정 및 상세기준 마련
 - 소장기록물 저작권자 명시 및 저작권 양도 절차 도입
 - 공공기록물 공익성을 고려한 저작권 제한범위 확대 등
- 비규격 전자 및 영상기록물의 체계적 보존·관리방안 마련
 -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및 웹기록물의 수집·관리 절차 도입
 - 국가 주요사업 및 행사 등에 대한 영상기록물 생산의무 부여 등
- 기록관리 환경에 부합하는 표준 정비 및 확산
 -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보장 및 체계적 관리·활용을 위한 「메타데이터」 국가표준화 방안 연구
 -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에 따른 「데이터 연계규격」 표준 개정

② 각급기관의 기록관리 역량강화 지원

○ 각급기관 전문요원 배치 지원

- '10년 법정 배치기한 도래 기관의 전문요원 배치현황 조사
※ 지방경찰청, 지방국세청 등 중앙부처 소속기관 154개, 軍기관 127개 기관
- 전문요원 배치지원 방문 컨설팅(상·하반기, 48개 자치단체)
- 전문요원 기록관리 우수사례집 제작·배포('10.4)
- 전문요원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관학포럼 개최('10.8)

○ 수요자 중심의 기록관리 교육 확대

- 교육생 수준별·기관별 특성에 맞는 과정편성(16개 과정)
- 찾아가는 맞춤형 기관 방문교육 운영 확대
-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사이버교육 확대
※ 연 10회, 3,102명 → 연 12회, 3,600명(월 300명)
- 수강신청·등록 등 학사관리 온라인 시스템 본격 운영

③ 기록관리 현황평가 및 기록관리기관간 협력의 강화

○ 기록관리 평가 강화로 기록관리 인식제고

- 기록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평가대상을 확대
※ '09년 126개 기관 → '10년 220개 기관(정부산하 공공기관 포함)
- '기록관리평가시스템'을 통한 온라인 평가방식 도입
- 정부합동감사와 연계, 주제별 테마형 감사 및 컨설팅 실시
- 법령 미준수 및 자료 미제출 기관 대상 특별점검 추진

○ 헌법기관 및 중앙부처 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력 확대

- 헌법기관과의 정기적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록관리 표준 및 시스템 노하우 공유, 보존복원 등 지원
- 중앙부처, 자치단체 등과의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채널 확보 및 기록관리 정책방향 상시 공유체계 마련

④ 기록물 보안관리 강화 및 연구개발 확대

-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보장을 위한 보안인증체계 확충
 - 민간/공공기관 등 전자기록물 장기검증서비스 확대기반 마련
 - ※ 민간(NPKI) 4개 기관 및 교육기관(EPKI) 인증체계 수용
 - 지자체 및 교육청 대상 국가기록물 고유식별체계(UCI) 확산 등 온라인 유통 인증체계 도입
 - 조기이관 기록물 보존포맷변환 기능 적용 등 CAMS 고도화
- 기록물 보안 및 재난관리 체계 강화
 - RFID를 활용한 기록물 보안관리 체계 구축 확대
 - ※ '10년 40만권, 누계 총 200만권 부착·관리('06~'10)
 - 비전자 기록물 중심의 '기록물 재난대책'에 전자기록물 관리 반영
- 종이, 전자, 시청각 등 5대 핵심분야 연구개발(R&D) 지속 추진
 - 전자기록 대량이관에 대비한 전자기록 인프라 연구에 집중

⑤ 기록물 보존 및 전시 시설 인프라 확충 추진

- 중간기록관리시설 건립 추진
 - 규모 / 위치 : 약 12,510m²(80만권 수용)/ 정부대전청사 부지내
 - 사업비/기간 : 약 216억원 / 2008 ~ 2012년
 - ※ 신축공사 착공 : '10.10, 사업비 22억원
- 역사기록관 리모델링사업 완공('10.4) 및 전시관 확대·개편
 - 서고증축, 파워플랜트·업무동 신축 및 숙소동 재건축
 - 실록, 시청각, M/F, 종이기록물 등 매체별 전문서고 구비
 - ※ 보존규모 변화 : 수용량 139만권→200만권, 서고 20개→28개
 - 리모델링에 따른 전시공간 확대(207m²→733m²)로 기존 기록문화 전시관을 '조선왕조실록실' 및 '기록역사실'로 특화
 - ※ '10년(조선왕조실록실, 약 280m²) → '11년(기록역사실, 약 137m²)

- ◇ 지식강국 실현을 위한 기록정보의 체계적인 자원화 추진
- ◇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록정보 서비스 강화

1 주요 국가기록의 콘텐츠화

- 편찬·콘텐츠 대상 기록물군(群) 조사·분석 실시
 - 소장 기록물군 중 지속적인 국가기록 편찬사업 대상 파악
 - '국가기록 중장기 편찬사업 추진방안' 마련
- 특정 정책 및 사회이슈 등 주제별 기록콘텐츠 개발 확대
 - 산림녹화, 식량증산, 수출정책 등 국가성장을 보여주는 발전 지향적 정책 콘텐츠 개발
 - 6.25전쟁 60주년, 산림녹화 50주년 등 2010년에 맞는 주제 발굴 및 콘텐츠 제작
- 생활기록 콘텐츠('사진 대한민국') 추가 개발
 - 기 구축한 '사진 대한민국' 콘텐츠에 5개 주제를 추가로 개발
 - 관혼상제, 졸업식, 시험, 영화 등의 친근감 있는 주제 중 선정
- 연표로 보는 시대별 기록콘텐츠 개발
 - 주제 위주 콘텐츠 보완을 위해 1945년 이후 시대상을 시기별(10년 단위)로 콘텐츠 화
 - '10년에는 1945~1959년의 시대상을 정리·제공 추진
- 주요 역사기록물 해제집 편찬 및 콘텐츠 개발
 - 일제문서(토목편), 일제시기 건축도면(법원·형무소편), 해외 수집 기록물(일본편) 등 해제집 발간
 - 일제시기 건축도면(병원·세관·총독부 부속기관편) 목록 작성 및 스캐닝을 통한 콘텐츠 화
 - 독립운동 관련 인물, 사건, 단체 정보 추가 구축(약 300건)등

② 정보공개 활성화 및 열람서비스 강화

○ 비공개·비밀기록물 재분류 확대 추진

- 비공개기록물 생산기관별·유형별 분류 및 재분류 기준 작성
- 재분류 기준에 대한 생산기관 의견조회 및 협의·조정
 - ※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은 생산기관에서 사전 비공개기간 연장의견 제시
- 30년경과 1만권, 공개미분류 8만권 등 총 9만권 공개재분류 추진
- 중앙 및 특별행정기관 1,437건, 교육청 3,620건 등 총 5,057건의 비밀기록물 비밀해제 및 재분류 추진

○ 공개 재분류 기록물 해제 및 웹서비스 실시

-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재분류 기록물 생산기관별, 주제별 선별·분석
- 공개재분류 기준 공유·확산을 위해 가이드북 및 매뉴얼 발간
- 정부수립 이후 국가 주요정책 기록물 등 공개재분류 ‘중요기록물 해제집’ 발간

○ 기록물 온라인서비스 프로세스 및 고객만족도 개선

- 공개와 비공개기록물 분리 신청 등 온라인을 통한 기록물 사본신청 프로세스 개선안 마련
 - ※ 배부기능, 결재기능, 수수료 미납시 종결기능 등 추가
- 온라인 기록물 사본 신청이 편리하도록 나라기록포털 내에 이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추가
- 열람 절차·방법 등 열람업무의 다양한 사례 정리 및 열람 서비스 매뉴얼 발간·배포
- 일반민원, 기관고객, 온라인 이용자 대상 고객만족도 조사

-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기록물 정리·기술 활성화
 - 소장 기록물 기능어, 일반주제어 등 검색어 사전(시소러스) 확대
 - ※ 기능어 3천개('09) → 기능어 2천개, 일반주제어 5백개
 - 단체(7개 시·도)·인물·사건 등 기록물 전거레코드 구축(200개)
 - ※ 시·도의 경우 기존 사업에서 누락된 조직을 대상으로 선정하고, 인물·사건의 경우 이용자 검색빈도가 높은 순으로 선정
 - 지가증권 등 지적관련 중요기록물 총 8천권 기술 정비
 - 지방자치단체 기록물 234개 군·6,837개 계열 기술
 - ※ '09년 중앙행정기관 기록물 373개 군, 3,301개 계열 기술서 작성

③ 국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 확산

- 선진기록문화 대국민 확산활동 지속 전개
 - 우수 기록전통 홍보를 위해 「역사 속 기록사랑 이야기」 발간
 - ※ 일기류, 서한류 등 선조들의 기록사랑 자료 발굴·소개
 - 소장 엽서를 활용한 '엽서로 보는 시대풍경전'(가칭) 기획전시
 - ※ 근대시기 엽서 1,100여점 중 250여 점 선별
 - 기록문화 접근기회 제공을 위해 기록문화 탐방 추진(반기별)
 - 전문성과 대중성이 조화된 종합정보지 「기록인(IN)」 발간
- 국민친화형 기록문화 프로그램 운영
 - '기록사랑 나라사랑 백일장' 개최(제4회)
 - '기록생활화를 위한 일기공모' 확대 시행(제2회)
 - 우수 아이디어 공모를 위한 '기록관리 발전 제안 공모' 확대
 - ※ 기록관리 정책·제도 외에 보존·복원 등 전 분야로 확대 시행
 - 기록관리분야 주요 주제별 '기록관리 포럼' 개최(반기별)
 - ※ 민간기록관리분야 활성화 방안, 기록물 통합검색 발전방안 등 논의
 - 국민에게 찾아가는 '시민강좌', '청소년 체험교실', '기록문화 주말특별반' 등 운영

- ◇ 한국의 전통·첨단적 기록문화의 우수성을 대표 브랜드化
- ◇ 기록전통과 최첨단 기술을 융합한 국제적인 기록문화의 장 마련

◀ 2010 국제기록문화 전시회 개요 ▶

- ◆ 기간 및 장소 : '10.6.1(화) ~ 6.6(일) / 나라기록관, COEX 예정
- ◆ 주최 :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
- ◆ 구성 : 기록전, 산업전, 체험전, 국제회의 등

1 기록전 및 산업전 개최

- 국제기록관, 세계기록유산관, 대한민국관, 아카이브 세계관 등으로 구성
 - 세계기록유산 100여점 및 11개국 National Archives 유치 추진
 - ※ '구텐베르크 성경' 등 원본 7점, 복제본 10점, 영인본 80여점 등
 -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기록과 근·현대 성장기록 전시
 - ※ 새마을 운동 및 산업화 기록, 독일 광부·간호사 기록물 등
 - 엽서·우표, 교과서, 영화 등 15개 주제별 기록 전시
- 기록관리 주요 기술·장비 전시
 - 종이/행정박물, 시청각기록, 전산/전자기록, 시설/보안/환경 등
 - 기록관련 국내외 100여개 업체(국내 65, 해외 35) 유치 추진

2 국제회의 개최

- ICA, EASTICA 집행이사회 등과 연계한 국제회의 개최로 해외 전문가들의 많은 참가 유도
 - 국제기록문화전시회 세미나(6.1~2)
 - ※ 세미나 주제 : "기록문화유산, 기록, 그리고 기술"
 - '10년 ICA 집행이사회(5.31~6.4)
 - '10년 EASTICA 집행이사회·세미나(5.31~6.3)

③ 체험전 개최 및 관광코스 개발

- 기록관련 다양한 전통 의식 및 체험프로그램 유치
 - 우리의 우수한 기록문화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전통의식 재연
 - ※ 팔만대장경 이운식, 국가기록 봉안의식 등
 -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보고, 느끼고, 만져볼 수 있는 기록 관련 체험프로그램 구성
 - ※ 한지제조 시연·체험, 전통부채 만들기, 고서 만들기 체험 등
- 세계기록유산, 관련 전시관 등을 연계한 패키지형 관광코스 개발
 - 당일 또는 1박 2일로 주변 지역을 묶은 테마별·권역별 여행 코스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('09.12월말 개통 운영)
 - 관련기관 홈페이지, 최신 관광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홍보 실시
 - 지역교육청에 대한 홍보로 초·중·고 학생 현장학습 적극 유도

<전시관 구성(안)>

